민주 8·28 전대, 친명 '통합' 비명은 '혁신'

선두 이재명, 강력한 리더십 방점
97그룹 등 세대교체론 힘 싣기
윤영찬·고민정 최고위원 출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도전하는 당권 주자들의 '민주당 청사진'도 계파 간 이해와 각자의 처지에 맞춰 차별화하는 양상이다.

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당권 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상임고문은 비명(비이재명)계를 아우르는 통합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이에 맞서는 비명계 주자들은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을 깨기 위한 과감한 혁신으로 승부를 보려는 태세다.

이 고문에 맞서는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중 한 명인 강병원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당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을 당 대표가 아닌 중앙위에서 인준하도록 하는 등 당 대표의 공천권을 내려놓겠다는 게 핵심이다.

박용진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윤석열 정부가 자꾸 실수하는 상황에서 '기회만 잘 보면 된다'고 생각하면 진다"면서 "정부에 실망이 커도 민주당이 혁신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혁신을 강조하는 메시지는 결국 어느새 당의 주류가 된 이 고문과 친명(친이재명)계는 이미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만큼 이들이 2선으로 후퇴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세대교체론을 등에 업은 이들이 주류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고 전면에 나서야 선거 패배의 흔적을 지울 수 있고 민심에 강력한 혁신의 의지도 보일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강훈식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새로운 사람들이 나서면 국민이 '달라지는구나. 혁신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야 한다"라고 밝혔다.

1위 주자로서 이들의 공세를 막아내야 하는 이 고문과 친명계 역시 혁신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동력은 당의 통합으로 마련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비명계와는 확실히 결이 다르다.

당원 지지세가 가장 두터운 이 고문이 당권을 잡아 강력한 리더십으로 통합을 견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친명계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변화를 만들려면 통합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계파에 따른 의원 간 불신을 없애고 강성·온건 지지자를 통합해 이를 바탕으로 민생을 챙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엇갈리는 이해관계로 당권 주자 간 대결 구도가 선명해지는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전에서도 비교적 잠잠했던 친문(친문재인)계가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레이스가 가열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과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최고위원 도전을 선언했다.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 이전까지 친명 성향의 강경파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의 장경태, 이수진(동작을), 양이원영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는 등 친명계 의원들의 움직임이 활발했다.

/연합뉴스

"한일 가장 가까운 이웃…긴밀협력"

윤 대통령, 아베 분향소 조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내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아베 전 총리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베 전 총리 영정을 바라보며 잠시 묵념했다. 검은색 정장과 넥타이 차림이었다.

윤 대통령은 조문록에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고 아베 신조 전 총리님의 명복을 기원한다"며 "유족과 일본 국민에게도 깊은 위로를 표한다"고 적었다. 이어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조문록 내용은 대통령실 전속 카메라에 잡혔다.

윤 대통령이 새 정부의 한일관계 복원 의지를 강조해온 만큼 자민당 내 최대 계파를 이끌었던 아베 전 총리를 각별히 애도하는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분향소에는 윤 대통령이 보낸 조화가 자리했다. 옆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조화도 나란히 놓여있었다.

윤 대통령은 조문록을 작성한 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와 잠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조문과 별도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회부의장, 중진 의원들로 구성된 조문 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키로 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 각 부처 정원 1% 줄여 재배치

정부가 대대적인 조직진단과 부처별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재배치하는 '통합정원제'로 군살 빼기에 나선다.

정부는 최근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행정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향후 5년간의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조직진단 실시 및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인력 운영 방안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은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 인력은 참여정부 97만8,000명에서 이명박정부 99만명, 박근혜정부 103만2,000명으로 꾸준히 늘었고 문재인정부에서는 116만3,000명으로 급증했다.

먼저 정부는 전 부처 대상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부처별 자체진단, 민·관 합동 종합진단, 대규모 증원 분야에 대한 심층진단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범정부 차원으로 대규모 정부조직진단을 하는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이다. 조직진단 대상은 48개 중앙행정기관이다.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했거나 유사한 기능을 하는 조직이 중복으로 존재하는 것을 찾아 정부 조직·인력을 효율화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관리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여야, 제헌절 이전 국회 원 구성 공감대

국회의장 중재 회동…이견 여전

여야는 오는 17일 제헌절 이전까지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데 12일 공감대를 이뤘다.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회동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은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양당 대변인들이 전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제헌절 이전까지 우리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자는 부분에서는 양당 대표, 의장까지 다 그 부분은 일정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논의가 답보상태에 있던 여러 이유가 있다. 원 구성 협상 이외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나 다른 여러 전제 조건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끼리 만나 협의를 하고 상임위 배분에 대해서는 원내수석부대표끼리 만나 또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일괄타결하기로 하되 논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수진(비례)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까지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서 원구성 협상을, 그간 이견이 있던 부분들에 대해 진전을 보도록 얘기했다"며 "국회 개혁 조치나, 4월 합의안에 대한 내용도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논의의 틀을 만들어 계속 논의해 빠르게 원 구성 협상 이어가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핵심 쟁점인 사개특위 정수 문제에 대해선 "실무적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추가로 따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법개혁특위나 법사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여야가 17일 제헌절 이전까지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 대행은 회동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성시키는 사개특위 구성이 왜 상임위에 걸림돌이 돼야 하는지 지금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할 수 없다"며 "오죽하면 상임위 구성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대정부 질문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자고, 반쪽짜리 국회를 열자고 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단순히 우리가 후반기 국회의 18개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한 협상 과정만은 아니라고 본다"며 "2년 단위로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이 끝없는 정쟁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